

‘살아움직이는 사회’의 조건

글 | 김정구 _ 한국물리학회장/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jnine@snu.ac.kr

김겨울을 지나 봄이 다가온 요즘,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몇 분이 TV 광고에 등장해 “하면된다” 그리고 “해봤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광고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임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코앞에 닥친 경제 살리기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더 큰 임무는 아마도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리라. 희망을 심어주는 방법도 60~70년대의 ‘하면된다’는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는 국가 간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2006년 수출 3천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쾌거의 중심에는 우리의 대기업과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된 인재들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화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꼬리 부분이 튼튼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형태는 획일적인 질서가 요구되었던 70년대와는 사뭇 다르다.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위주에서 금융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다원화되고 또한 구성원은 획일적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사회적 이동현상’이 많은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국가 발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런 변화 중 하나가 롱테일 현상의 대두이다. 여러 사회 현상에 적용되는 파레토 법칙은 상위 20%의 부유층이 80%의 부를, 꼬리부분 80% 인구가 나머지 20%의 부를 소유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소수의 큰 것들이 다

수의 작은 것보다 훨씬 중요함을 의미하는 법칙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의 유통이 쉬워지면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파레토의 법칙과는 달리, 꼬리부분에 해당하는 다수의 작은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의 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맞먹는 롱테일 현상이 출판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그렇지만 꼬리 부분이 튼튼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던 작은 것들, 개개인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탈규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잠재력이 자발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여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롱테일 전략의 도입, 즉 꼬리 부분을 강화하는 국가 발전 정책의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다양한 중소기업의 활성화, 집중화 대신 분산화로 다양한 계층의 활력을 살려 다이내믹 코리아를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한 두 해의 국가발전 목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장기적 국가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미래 국제 경쟁력의 확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교육의 경쟁체제 도입과 과학기술의 진작이다. 다양성과 경쟁력이 기본이 되는 이 시대



에는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교육의 제공과 미래 국가경쟁력의 요소인 과학기술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교육의 경쟁체제 도입과 기초연구 강화 없이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는가? 모두가 99점을 맞는 시험으로는 미래가 없다. 암기위주의 과학교육으로 앞으로 어떻게 미국,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흥 개발도상국인 인도나 중국을 이길 수 있겠는가?

과학기술 연구부문도 마찬가지다.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기초 개인연구 과제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개발과제위주 정책으로 대형과제만을 지원하여 이는 신기루만을 추구하는 사상누각 꼴이 된다면, 언제 어떻게, 우리 과학계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과학계 · 산업계에서도 롱테일 전략 펼쳐야


현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연구 주축은 대학과 출연연구소, 그리고 기업연구소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체에서 추진하는 생산기술연구는 지난 20년 간 괄목할 진전을 보여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질 만큼 성장했다. 출연연구소는 주로 응용연구를 위주로 조직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구와 생산연구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주로 대학에서 진행되는 기초연구는 미래 경쟁력의 근원이 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개발 및 응용연구 위주의 과학기술 정책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태이다. 특히 당장의 응용성이 눈에 띄지 않는 일부 기초과학 분야는 생존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정도로 연구비 지

원이 없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기초과학의 경우 비록 당장의 응용성은 없어 보이더라도 소규모 개인연구가 활성화되어서 이 연구결과의 일부가 응용연구로 이어지는 토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과학분야의 롱테일 전략이다.

지난해에 기초과학회협의체(수학, 물리학 및 화학)는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개인 연구 과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폴뿌리기초과학 살리기 운동을 펼쳤고, 그런 노력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그 결과 올해의 개인 연구과제 지원 총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700억 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대학의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의 1/3에게 자기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소규모 개인 연구과제 지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개인연구과제의 확충이야말로 과학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된다.

대기업은 자율성만 보장된다면 성장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펼쳐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중소기업의 총생산이 대기업의 총생산과 비슷해질 때 우리 경제구조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산업계의 롱테일 전략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의견 표출과 많은 불만 요소 때문에 '사회적 요동현상' 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요동현상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국민적 의지만 있다면 의견차이나 불만의 요소가 오히려 상승 작용을 일으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때의 고통 극복 과정이 그렇고,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국민 모두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한다. 실용적 과학기술인의 견해, 기업인의 교육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투영되어야 한다. 사회 인프라 유지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 봉사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활력소 역할을 해야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미국 노터데임대학교에서 초전도 현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